

문 대통령, 종전선언·백신협력 강화 제안

유엔총회 기조연설...BTS와 한무대 '동접 100만'

호놀룰루서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인수식 참석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 회원국 정상을 대표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개최식에 참석, 한국이 코로나19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



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이 함께했으며, 그 영향으로

SDG 모멘트 행사는 생중계 동시접속자가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임기 말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엄

중한 안보정세 속에 실질적인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신과 관련한 성과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회장을 만나 내년도 코로나 백신 추가 구매 및 조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백신 원부자재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 식에도 참석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이었던 한미 양국의 백신 협력이 중소기업, 나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로까지 확산하는 토대를 쌓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양국의 백신 교환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영 정상회담 외에도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베트남에는 내달 중 100만회 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친 뒤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 22일 번지볼 국립묘지 헌화,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 미국인 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한국전 참전 용사 유해에 대한 한미 간 상호 인수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27일 통과 재확인 여, 8인 협의체 교착 해소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막판까지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독소조항 삭제'를 고수하며 버티는 야당을 향해 대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자 100분 토론

정의당 이정미(왼쪽부터), 황순식, 심상정, 김윤기 대선 경선후보자가 23일 서울 삼암동 MBC에서 열린 특집 MBC 100분 토론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시작 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개발 특혜'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국힘·국민의당 공조... 107명 전원 참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제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플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우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과 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당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 초강경 발언 '직선 본능'

"1원이라도 이득 봤다면 사퇴"...약될까 독될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가 대장동 의혹 대응 과정에서 '직선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추석연휴 내내 직접 대장동 의혹 공방의 전면에 서서 초강경 발언을 거듭했다.

의혹에 대해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고 일축한 데 이어 비판자들을 향해서는 역공을 가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언론, 토건 세력을 하나로 묶어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전부 공공 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한 "중범죄", "집단학살범죄 이상"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퍼부었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고 책임론을 덧씌우며 반격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5·18 당시 언론의 '폭도 난동' 보도에 빗대기도 했고, 당내 특정 인사들을 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호남 모독'이라는 이 전 대표 측의 반격을 부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무료 변론' 논란 외중에 운영진 의원을 "흑색선전 범죄"라고 비난하거나, 이전 회계 당시 '떡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집중 공세의 표적이 될 때마다 전면에 서서 강경 발언을 내놓곤 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 지사의 스타일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약재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 발현된 셈이다.

이런 스타일의 특질을 두고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상대의 공세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쏟아지는 의혹에 숨지 않고 정면 대응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줘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다.

특히 당내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사가 유독 이번 의혹에 강력히 대응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의혹을 충실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정치적 역공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관망 중인 이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상대와 입씨름이 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이 커지는 등 공방이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할 리스크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23일 "수박 논란 등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표현을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면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전혀 문제없다,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방식의 대응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국민들은 더 나오는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하고 정면 돌파한 만큼 최소한 지지층에서는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중도층은 지지 철회가 아닌 유보인 만큼 추후 의혹이 정리된다면 오히려 강고한 지지층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airpurifier **DK**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